

✓ CLFA 소식

□ 대부업권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 ... 《 기익조사부 》

- 시행일 / 시행대상 : 2016년 12월 19일 / 상위 20개 대부금융사
 - 적용대상 : 개인 대출자에게 시행 이후 실행된 일정규모 이하 대출 상품
 -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
 - 주요 내용 : 대출계약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 및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신용정보원 대출기록 삭제
 - ※ 행사제한 : 개별 대부금융사 연 2회, 전체 금융업권 월 1회 초과 제한
 - 개별 대부금융사 업무처리
 - 완납고객과 동일하게 계약서 보관, 전산 상 고객 정보 분리 보관 적용 (대출심사 시 철회권 관련 대출기록 반영 금지)
 - 한국신용정보원 철회권 정보 반영(대출기록 삭제)
- ※ 회원전용게시판 382번 별첨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8.31) 참고

□ 변호사법 위반 관련 외원사 소송 진행 현황 ... 《 기익조사부 》

- 변호사법 위반 관련하여 회원사 및 협회의 금융당국, 대법원 탄원서 제출 (법률자문, 국회 회의록 등 자료 포함) 노력의 결과 대법원에서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에 대해 무죄 판결 선고 (16.8.18, 2015도19521*)
- 변호사법 위반 관련 하급심 무죄 판결 현황(대법원 선고 이후)

회사명	선고일자	선고법원	진행 내역
A에셋대부	16.09.30.	서울남부지법	2심 무죄 확정
B자산관리대부	16.10.13.	서울고법	2심 무죄 확정
C대부	16.10.13.	인천지법	1심 무죄 확정 (협회 사실조회 회신 사건)
D자산관리대부	16.11.04.	서울중앙지법	2심 무죄 확정
E대부	16.11.04.	부산지법	2심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관련 사건)

※ 회원전용게시판 382번 별첨2. 대법원 판결문 전문 참고

□ 대부금융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 ... << 기획조사부 >>

- 개요 :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협회와 회원사가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올해도 실시
- 설문조사 방법
 - 오프라인 : 회원전용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설문지를 각 회원사가 출력하여 영업소 내방 고객 또는 고객에게 우편물 발송 시 동봉하여 조사
 - 온라인 : 협회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는 설문조사용 배너 및 팝업창을 통하여 고객이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사 홈페이지에 배너 및 팝업창 설치)
- 설문조사 일정 : 11월 25일(금) ~ 12월 24일(토)
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지는 1월 9일까지 협회로 송부

□ 서울시 위탁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 실시 ... << 교육사업부 >>

- 개요 :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서울시 관할 대부(중개)업자 대상 준법교육 실시(총 1,694개 회사 참석, 참석률 59.3%)
- 주요 교육 내용
 - 대부회사 주요점검 및 지적사항
 -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및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 일시 및 장소

회차	1차(11/14)	2차(11/15)	3차(11/16)	4차(11/22)	5차(11/23)
대상 지역	강북·도봉 성북·용산 은평·종로 중구·서대문	강동·광진 노원·성동 송파·중랑 동대문	관악·금천 동작·서초	강서·구로 마포·양천 영등포	추가교육 (미참가자)
장소	서울시청	서울시청	동작구 구민회관	마포구청	마포구청
인원	429	368	315	325	257

※ 해당일 10시 ~ 12시(2H) 실시

□ 제3회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 << 교육사업부 >>

- 개요 : 민간자격시험인 “제3회 대부관리 자격시험” 실시
- 주요 내용 : 회원사 소속 666명 자격시험 응시(응시율 91.6%)
- 시험일 : 11월 19일(토) 14:00~15:40
- 장소 : 서울(관악고), 부산(세정고), 광주(한국인성연구원)
- 응시현황

지역	접수인원	응시인원	결시인원	응시율
서울	555	508	47	91.5%
부산	121	114	7	94.2%
광주	51	44	7	86.2%
합계	727	666	61	91.6%

※ 금융위원회의 응시자격 제한 완화로 2016년 11월 8일부터 일반인 응시도 가능

□ 32次 대부업 등록교재 발간 ... << 교육사업부 >>

- 개요 : 대부업 등의 등록교육 교재 32차분 발간(16.11.25)
- 주요 내용
 - 최근 배포된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반영
 - 다수의 유권해석을 새로이 첨삭하여 대부업 법률 이해에 도움

□ 4분기 사외공헌활동 추진 ... << 경영관리부 >>

- 개요 : 협회와 회원사가 공동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독거노인 돕기 기부금 전달
- 주요 내용 : 희망하는 회원사(11월 28일 기준 14개사)와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기부금 전달 및 독거노인에게 겨울이불 전달 행사를 진행 예정
 - ※ 지원 지역 : 동작구, 양천구, 종로구(모금액에 따라 추가 가능)
- 일정 및 장소 : 12월 초 예정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금융당국 소식

□ 제재개혁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금융위원회 》

- 개요 : 16.11.29. 국무회의에서 금융권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금융법* 개정안이 통과 ※ 회원전용게시판 382번 별첨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16.11.29) 참고
-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 주요 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대부업법 현행 유지)
-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대부업법 현행 유지)
-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대부업법 현행 유지)
-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대부업법 현행 유지)
-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현 행	개 정
과태료 최대부과 : 최대 5천만원 대형 금융회사 위반행위 제재 부족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 평균 2~3배 인상
대부업법 과태료 한도 : 2천만원	대형 대부회사는 저축은행과 동일적용 부과한도 최대 5천만원 인상

-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현 행	개 정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상한규정 없어 체납가산금 부담 과도 과징금 체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적용 (일할 계산 부과)	다른 법률 사례(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각 시행령)에 맞추어 과징금 가산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현 행	개 정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없어서 법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시 금융소비자 불편이나 금융시스템 불안정을 초래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 등 공익 훼손이 우려되는 주요업권 대상 (정지 해당사유 및 공익성 요건 구비)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 과징금 부과한도는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

-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현 행	개 정
영업정지 처분사유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 수준이어서 임원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됨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직무정지’로 변경
대부업법 13 § ⑥ ii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대부업법 현행 보완)

현 행	개 정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치 않아 법 적용 혼선 초래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대부업법 13 § ⑦ 금융위원회는 퇴임·퇴직한 대부업 자 등의 임직원이 재임·재직 중이 있더라면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 원장으로 하여금 대부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 대부업자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추진 ... 《 금융감독원 》

- 개요 : 금감원은 34개 대부회사를 상대로 실시한 현장검사를 토대로 대부
업계 내 내재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발표(2016.8.2.)
- 주요 내용
 - 연대보증 관련 계약 주요내용 고지 및 소득확인 철저 이행
 - 5년 이상 장기계약 체결 관행개선(계약기간의 다변화 추진 예시:1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11/7) 및 대부업권의 자율 준수 동의 독려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부활 자제 권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요청에 적극 동참 독려
- 협회 대응
 - 협회와 회원사가 대부금융업 업무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 직접대출사 T/F 1차 회의(10/26), 2차 회의(11/9) 실시
 - 매입추심사 T/F 1차 회의(11/18) 실시
 - 업계 의견 청취 후 금융당국 전달 예정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T/F ... 《 금융감독원 》

- 개요 :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주요 내용 :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 실사, 채권 정보 완전 제공 등 2주 단위로 관련 회의 개최
- 경과 및 향후 일정
 - 10/31 1차 회의, 11/10 2차 회의 실시(12/1 3차 회의 예정)

□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 ... 《 금융감독원 》

- 개요 : 금융감독원에서는 2016년도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범금융권 협의체 회의 개최
- 참석 대상
 - 금감원 : 수석부원장 및 관련 부서장
 - 각 금융협회(12개) 및 금융유관기관(3개) : 부기관장
- 논의 안건 : 5대 금융악 및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 일시 및 장소 : 12월 12일(월) 10:30~13:00,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 3유·3불 추방 및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 《 금융감독원 》

- 개요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경찰청 및 범금융권은 피해예방 대책 마련 및 추진
- 소관부서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총괄팀
- 협회 협조 요청 사항
 - 협회 및 회원사 홈페이지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배너 및 팝업 설치
 - 문자메시지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전송
 - 대출심사시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표 도입
 -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 회원사 배포
 - “보이스피싱 안 속는다 전해라~” 캠페인 송(song) 전파

□ **법안 신규 발의 현황**

법률명 (일자)	발의자 (소속)	주요 내용	비고
대부업법 (16.11.14.)	이용호 의원 (국민)	·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중지 (안 §9의6①,②).	
채권추심법 (16.11.21.)	지상욱 의원 (새누리)	-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통지 의무 (안 §5②) - 소멸시효 완성, 파산 또는 개인회생 면책 결정한 채권에 대한 양도·양수행위 금지 (안 §11②) - 채권추심의 일시 중단 사유* 마련 (안 §13의3) ※ 재난, 질병, 파산 또는 개인회생	
소송촉진법 (16.11.21.)	지상욱 의원 (새누리)	-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 부분 송달시부터 적용되는 소송이율을 기존 법정상한선 범위인 연 40%를 이자제한법상 상한선인 연 25%로 인하	현행 시행령 연 15%

□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11/16) 결과**

- 개요 :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부업법 (설훈 의원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공고
- 회의 결과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11/21, 24 안건 상정 후 계속심사 중)
- 설훈 의원(더민주) 대부업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부업 실태조사 절차 위임근거 및 행정기관 협조 근거규정 마련	- 대부업자 등의 현황 및 영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할 필요 검토됨. -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통하여도 입법목적 달성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포괄적인 협조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 - 다만, 협조대상을 명확히 하는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국외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11/22) 결과

- 개요 :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대부금융업과 관련이 깊은 채권추심법(노웅래 의원안), 이자제한법(강병원 의원안)에 대하여 상정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공고
- 회의 결과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11/24, 28 안건 상정 후 계속심사)
- 노웅래 의원(더민주) 채권추심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조정종료시까지 변제요구 금지	- 채무자의 단순 조정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추심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 - 채무자가 조정절차를 채무면탈을 위하여 악용할 우려
나. 추심목적 무효, 시효완성 채권의 양도·양수 금지	- 단순 양·수도 후 추심하지 않은 행위는 처벌 불요 - 소멸시효의 완성은 민사소송 전 판단 불가
다. 채권추심 중단 사유 (채무조정, 재난, 질병, 중상해 등)	- 채무자가 조정안 확정을 거부하여도 추심이 중단되는 모순발생 - 추심중단 사유의 의미가 불명확함 - 추심중단과 소제기 제한(지급명령 등)의 구별이 불명확함

- 강병원 의원(더민주) 이자제한법 발의안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가. 이자율 상한 연 20% 하향	- 입법정책적 결정을 요함(최고이자율 지속적 인하 추세) - 현행 대통령령으로 인하 가능 - 고금리 자금수요자의 자금차입 기회 축소 우려
나. 적용범위를 모든 금전채권 계약으로 확대	- 대부업 등록(양성화)의 유인효과 없어짐. - 특별법우선의 원칙상 법체계와 맞지 않음. - 대부업법 (강병원 의원안)의 정무위 심사경과 관찰
다. 최고 이율의 2배 초과 이자 수령시 징역 및 벌금형 병과	-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국가개입의 최소화가 권고됨. - 상한선 단순 초과와 2배 초과의 법정최고형 구별실익 모호함

□ 국외 상임위원회의 의의 일정

위원회		일시	안건/회의결과
정무위	전체회의	11. 16. (수) 10:00	- 대부업법 (설훈 의원안) 상정 및 소위원회부
		11. 24. (목) 14: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심사
	법안심사 소위	11. 21. (월) 10:00	-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 대부업법 (설훈 의원안) 신용정보법 (추경호 의원안)
		11. 22. (화) 10:00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
		11. 23. (수) 14:00	-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심사
		11. 24. (목) 10:00	- 대부업법 (설훈의원안) 심사
법사위	전체회의	11. 22. (화) 10:00	- 채권추심법 (노웅래 의원안) 상정 및 소위원회부 이자제한법 (강병원 의원안) 상정 및 소위원회부
	법안심사 소위	11. 24. (목) 10:00	- 채권추심법 (박병석 의원안, 제윤경의원안) 이자제한법 (강병원 의원안) 심사
		11. 28. (월) 10:00	- 채권추심법 (박병석 의원안, 제윤경의원안) 이자제한법 (강병원 의원안) 심사

✓ 회원사 소식

□ 백혈병 소아암 후원회 등에 기부 ... << 콕핀테크대부 >>



- 개요 : P2P 운영을 하는 콕핀테크대부가 백혈병 소아암 후원회와 사랑정원에 기부
- 주요 내용
 - 3분기 9월까지 총 500만원 기부
 - 백혈병 소아암 후원회 300만원(총 6명의 환우에게 50만원씩 전달)
 - 사랑정원 200만원(12월 10일 소외계층 가족사진 촬영에 사용)

※ 회원사 소식 페이지에 게재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매일 10일, 25일까지 메일 (ra@clfa.or.kr)로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소식

□ 음성녹음 시 계약서 교부의무 관련 유권해석 ... < 법제처 >

- 대부업법은 계약체결 절차와 형식을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엄격하게 규정
 - 대부업법 §6①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종이문서”로 작성되어 대면 또는 우편 송부의 형태로 전달됨을 전제로 함.
- 다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 및 자필기재를 갈음한 경우(대부업법 §6의2③i)에 예외적으로 전자문서 형식의 계약서 교부가 유효
- 공인인증서 방식이 아닌 음성녹음 방식(대부업법 §6의2③ii)으로 본인확인 및 자필기재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계약서를 이메일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교부할 수 없음(종이문서 교부 필요)

※ 회원전용게시판 382번 별첨4. 법제처 보도자료(16.11.23) 참고

□ 표준약관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공정거래위원회 >

-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표지를 기존 공정위 상징 문양에서 정부 공통 상징 문양으로 변경
 - “표준약관 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시행(16.10.31)
- 주요내용 : 표준약관 사용 사업자는 고시 시행일(16.10.31) 이후 표준약관 표지의 문양을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함.
- 표준약관 사용 시 준수사항
 - 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 시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약관법 §19의3⑥,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나.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관 사용 시 표준약관 표지 사용 금지(약관법 §19의3⑧, 위반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다. 표준약관 표지 사용 시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은 무효(약관법 §19의3⑨)

※ 가, 나의 경우 위반 시 제재가 있으니 현재 사용 중인 약관 검토 필요

✓ 기타 소식

□ 2016년 12월 주요 세무일정

- 개요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등
- 주요 내용
 - 원천세 : 2016년 11월 **갑종근로소득**(근로소득, 일용직,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한 경우 기한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 원천세액 납부 의무
 - 법인결산 참고자료 : 가결산을 통한 **재무상태의 점검**,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영수증 누락이 없는지 **각종증빙** 등의 수취 확인 필요
- 세부일정

일 자	세 부 내 용	비 고
12/9(금)	·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단위 신고 납부) 승인신청 및 포기신고 기한	해당 시
12/12(월)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기한 · 11월 귀속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	공통사항
12/15(목)	· 종합 부동산세 납부신고기한 · 고용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기한	해당 시